전년비 8% 늘어 첫 6조원대…기초노령연금 비중 10% 넘어서

전남도 내년 예산 6조2832억원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숲·섬 가꾸기, 100원 택시, 투자펀드 등 신규사업 반영

복지·건강 증진 가장 많이 늘고 관광·문화 예산 줄어

전남도가 2015년 예산을 6조2832억원으로 편성해 6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5조8032억원에서 4800억원(8.3%)이 늘었으며, 예산 규모 면에서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6일 전남도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일반예산은 5조4740억원, 특별예산은 8092억원이다. 주요 신규사업 예산은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강소기업 육성지원(10억원), 엔젤투자펀드 출자(10억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40억원), 뿌리기업 선도기업 육성(30억원), 아름다운 숲 가꾸기(10억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10억원), 100원 택시(6억원), 나주호혜원 폐업보상(30억원) 등이다.

■ 전남도 2015년 분야별 예산안

(단위:억원)

분야	예산	전년대비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1224	342↑
농림·해양수산	1조1060	540↑
관광·문화사업	2931	172↓
복지·건강증진	1조 6832	1612↑
교육여건개선	1620	13↑
지역개발	6066	889↑
주민안전	2411	314↑
환경조성	4673	476↑
공공행정 및 기타	7922	303↑

기초노령연금지원 예산은 6505억원으로, 지난해(4556억원)보다 무려 1949억원<6505억원>이 증가해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일반회계의 11.9%)를 넘어섰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최대 20만원)과 지급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급식 예산도 200억원 편성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내년도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은 추경 때 편성할 계획이다.

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예산은 1838억원으로, 지난해 1500억원에 비해 338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노후 소방장비 보강(123억원), 무안소방서 신축(40억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014년 1524억원에서 175억원이 증가한 1699억원, 지방세 징수 교부금 역시 129억원에서 6억원이 늘어 135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영유아 보육료지원(1198억원), 국민기초생활 보장(1650억원)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30억원과 424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1224억원(지난해보다 342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1조1060억원(540억원 증가), 관광·문화사업 등 2931억원(172억원 감소), 복지·건강 증진 1조6832억원(1612억원 증가), 교육여건 개선 1620억원(13억원 증가), 지역개발 6066억원(889억원 증가), 주민안전 2411억원(314억원 증가) 등이다. 또 환경 조성에 4673억원(476억원 증가), 공공행정 및 기타에 7922억원(303억원 증가) 등이 배정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 교부세가 감소할 것을 대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실·과 요구액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치권으로 번진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갈등

여 "정책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야 "朴대통령 공약…정부 책임"

김무성 무상급식 재검토 시사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6일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아붙으면서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내세우며 교육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내년도 예산심의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의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선심성 행사를 포함한 지방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조달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세수부족분에 대해선 지방채를 발행한 뒤 교육부가 인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당 지도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이날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를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며 시도교육청에 다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사업에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총회를 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국 기초단체장 "기초연금·무상보육 예산 부담 더는 못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경주 선언문' 채택

지방소비세 확대·입법권 분점·생활경찰권 이양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5명이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에서 '경주 선언문'을 채택, 이같이 밝혔다. 해외출장 등 자리를 비우거나 사정상 불참한 단체장 가운데 80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000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000억원,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 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 체계(청주대 손희준 교수)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순천대 정순관 교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인하대 이기우 교수) 등 지방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단체장들은 또한 "지금과 같은 신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요구했다.

경주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시·군·구에서 담당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허용 ▲자치조직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개헌이 논의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충훈 대표 회장은 "경주선언문은 국가개조의 원칙이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